

북한의 미사일 위기 고조의 진단과 전망

2006. 6. 19.

- 북한의 미사일 위기설 진단
- 미사일 위기 고조의 의도
- 향후 전망과 파장

□ 북한의 미사일 위기설 진단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는 추진체 및 탄두 조립을 마치고 연료 주입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3단 로켓으로 구성된 대포동 2호 및 개량형 미사일 발사는 4단계로 구분

- 미사일 추진체(1, 2단 로켓)의 조립과 탄두(3단 로켓) 결합 → 발사대 장착 → 연료 주입(1~2단은 액체 연료, 3단인 탄두는 고체 연료 사용) → 발사
- 미사일 이름은 발사 예정지인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옛 대포동) 지명을 따

- 현 단계는 발사대 장착 이후 연료 주입 직전이거나 주입 단계에 있어, 조만간 발사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설이 유력함

- 발사대 장착 모습이 6월 13일 포착된 이후, 미사일 실험 발사장 주변에 액체 연료 탱크 10여 개가 확인되었음
- 그러나 연료가 주입되면 1~2단 로켓에는 저온 액체 연료의 속성상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흰색 연기를 내뿜어야 하나, 아직까지 이는 포착되지 않았음
- 연료 주입 기간에도 해석차 존재 : 사거리 2,500km의 대포동 1호는 액체 연료 주입에 하루가 걸린 것과 달리, 대포동 2호 및 개량형(6,000~15,000km)은 최소 2~3일에서 최장 1주일 정도 소요된다는 해석도 존재
- 또한,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목표 추적 레이더와 기상관측 레이더의 움직임이 없었으며, 미사일이 날아갈 것 같은 '경계 구역'도 선포하지 않았음

※ 대포동 1호(1998. 8. 31) : 발사 2~3주 전에 목표 추적 레이더와 기상관측 레이더 가동 → 2주 전에 추진체 조립 및 발사대 장착 예행 연습 → 6일 전에 시험장 해역과 항해 금지 구역 설정 → 2~3일 전에 미사일 추진체와 탄두 결합 후 발사대에 장착 → 하루 전에 액체 연료 주입

- 더욱이,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핵 개발 능력과 핵·생화학 무기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1998년보다 더욱 심각함

- 대포동 1호(북한은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로 발표)의 경우, 1단 로켓은 동해 공해상에, 2단 로켓은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낙하되어 사거

리 측면에서 실패했고, 3단 로켓인 탄두는 대기권의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음

<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 >

	스커드 C	로동1호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대포동 2호 개량형
사거리(km)	500	1,300	2,200~2,900	4,300~6,000	6,000~15,000
추진 장치	1단 로켓 (액체 연료)	1단 로켓 (액체 연료)	2단 로켓 (액체+고체)	2, 3단 로켓 (액체+고체)	2, 3단 로켓 (액체+고체)
배치 여부	실전 배치 (1989년)	실전 배치 (1999년)	시험 발사 (1998년)	개발중(추정)	개발중(추정)

주 : 이외에 사거리 500km 이하의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은 실전 배치 상태이며, 지난 3월에는 사거리 100~120Km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음

□ 미사일 위기 고조의 의도

○ 북한의 미사일 위기 고조는 대화 촉구용 카드와 체제 결속, 미사일 개발 능력의 입증 등을 통한 대외 과시 등의 복합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 첫째, 미사일 발사라는 북한식의 '대담한 접근법' 시도를 통해 북미 직접 협상을 압박하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

- 위폐로 인한 교착 상태의 북핵 국면을 미사일이란 새로운 카드를 통해 미국의 관심과 협상을 유도하려는 의도 (대미 협상 타개 위한 '벼랑끝 전술')
- 북한은 핵보유 선언(2005. 2)에 이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면 핵으로서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게 되므로 대미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음
-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후, 북한은 1년 후인 1999년 9월에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페리 프로세스를 얻어냈고, 미사일 발사 유예를 발표하였음
- 미국은 금융제재와 인권 문제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북핵보다는 이란 핵 문제에 주력하면서 북한의 양자 접촉 제의를 거부해오고 있음
- 북한은 지난 6월 1일에 힐 차관보 초청을 통한 북미 직접 대화 제의를 미국이 거부한 데에 대해 "미국이 계속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대북 압박 도수를 높여나간다면 우리는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둘째, '군사 강국' 이미지를 통해 내부 체제 결속 강화 목적도 포함된 듯함
 -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한 군사 강국 이미지로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내부 체제 결속을 도모
- 셋째, 대외적으로는 미사일 개발 능력 과시를 통한 미사일 상품 가치 홍보용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은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로열티 및 부품 수출로 연 10~15억 달러의 외화를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외화 손실을 보존하면서, 향후의 북핵 협상을 부시 행정부보다는 차기 행정부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됨

□ 향후 전망과 파장

- 시험발사 가능성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북핵 협상과 남북 및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됨
- (시험발사 여부) 시험발사 및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나, 발사 시기를 늦추면서 막판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
 - 1차 때와 같이 일단 발사를 강행한 후, 미국과 협상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다수 존재하며, 실제로 힐러리는 부시대통령에게 6자회담을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대북 특사 임명과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냄
 - 그러나 궤도 수정과 제어 기술 등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면 실제 발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함
 - 따라서 연료 주입 완료를 늦추거나 연료 주입 후 발사 시기를 늦추면서 막판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함
- (주요국 반응) 미·일이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가 강행될 경우 양국은 주변국들의 대북 경제제재 참여와 UN 안보리 회부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재 수단의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
 - 미국 : '자위적' 차원의 대응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안

보리 제재와 요격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음 → 미사일 관측함(옵저베이션 아일랜드호) 나가사키 배치와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의 동해 배치 등

- 이로써 미국내 강경파의 입지 강화로 미사일 부품과 기술 확산 방지 명목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엄격한 적용과 북한에서 나오는 컨테이너 화물 검색 등도 더욱 강화될 것임
- **일본** : 아소 외상은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끝냈다”며 특정 선박 입항금지특별법과 개정 외환법 등의 발동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를 시사
- **중국** : 우려를 표시하지만, 미사일에 대한 직접적인 대북 비난 발언보다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장애 요인 제거를 촉구 →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및 일본의 무장 강화의 빌미 제공 가능성에 대해 불만
- **북한** : 한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법적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북한은 발사하더라도 1차 때와 같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것임
- 지난 1차 때에도 안보리는 중국 등의 반발로 ‘미사일’이 아닌 ‘사전 통고 없는 로켓 추진 물체’ 발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보리 ‘의장 성명’보다 한 단계 낮은 ‘대언론 성명’ 발표에 그쳤음
- 그러나, 미·일 양국은 그동안 대북 제재를 행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체 압박 수단은 많지 않으며,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협조 없이는 어려울 듯함

- (남북 관계 영향)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핵 협상과 남북 관계 및 경협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됨

- 미국내 강경파의 입지 강화와 중국 역할론 약화, 6자회담 무용론의 대두 등으로 미·일 주도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남북 관계도 대북 지원 중단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 (DJ 망북과 남북경협추진위에서의 경협 합의 등의 사업)
- 정부는 민간의 경협 사업과 미사일 발사는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이를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성 부각,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토지 분양과 정부 지원 차질 등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악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 특히 최근 개성공단의 1호 업체인 소노코쿠진웨어(남비 생산업체)의 남북협력 기금 유용설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의 미사일 위기는 개성공단 분양과 금강산 등지의 외자 유치에 차질 우려